
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11002] [대통령령 제32012호, 2021.9.24.,타법개정]

제1조 (목적)

이 영은 「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관련사업자의 범위)

「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0.11.24>

1. 「[한국전력공사법](#)」에 따른 한국전력공사
2. 「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(#)」 [제5조](#)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3.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물품·용역의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

제3조 (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)

-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「[원자력안전법](#)」에 따른 품질보증 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·운영에 필요한 물품·용역·공사 등(이하 "물품등"이라 한다)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,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 (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)

법 제8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[원자력안전법 시행령](#)」 [제35조](#)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수행할 경우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기간을 설정할 것
2.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, 점검 결과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·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
3. 원자력발전시설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의 정비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
4. 원자력발전시설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관련사업자의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·감독을 수행할 것

제5조 (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)

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·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.

제6조 (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)

-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의 경영목표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장 계약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·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 (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)

법 제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"이란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. <개정 2021.9.24>

제8조 (협력업체의 행위제한)

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 가격, 품질, 물량,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
2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「건설산업기본법」·「전기공사업법」·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(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하도급하는 행위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행위
3.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 등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

제9조 (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)

-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 1. 등록취소
 2.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입찰제한
 3.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-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물품등의 공급계약에서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 중인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경우 그 입찰제한 기간동안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협력업체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 (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)

-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2년마다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 (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)
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 (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)

법 제22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「[방사성폐기물 관리법](#)」 [제18조](#)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
2. 「[원자력안전법](#)」 [제15조의3](#)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
3.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

제13조 (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)

-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"이란 정책협의회의 의장(이하 이 조에서 "의장"이라 한다)이 회의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- ③ 의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,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⑤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⑥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- ⑦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개의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의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14조 (보고·서류의 제출 등)

법 제2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「[방사성폐기물 관리법](#)」 [제18조](#)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
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
3. 「[원자력안전법](#)」 [제15조의3](#)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
4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
5.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물품등을 공급한 업체

제15조 (과징금 부과기준)

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16조 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.
-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삭제 <2021.9.24>

제17조 (가산금)

법 제2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연체기간"이라 한다)이 30일 이하인 경우: 과징금의 3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

2.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60일 미만인 경우: 처음 30일에 대한 가산금(과징금의 3만분의 4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)과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(과징금의 3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)을 합산한 금액

3. 연체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: 과징금의 3만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

부칙 <제26362호, 2015.6.30>

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1169호, 2020.11.24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
① 부터 ⑫까지 생략

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"을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

⑭ 및 ⑮ 생략

부칙(공직자윤리법 시행령) <제32012호, 2021.9.24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

중 "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4항제17호"를 "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제17호"로 한다.

부칙(행정기본법 시행령) <제32014호, 2021.9.24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
① 부터 <23>까지 생략 <24>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. <25>부터 <36>까지 생략